

95.6.8

여성·가정

여성관련 통계 따로 낸다

통계청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에 가구주·배우자 소득 첫 구분

여성 기업주 올해부터 현황 파악...문화·보건통계자료도 성별분류 계획

김미경 기자

모든 여성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여성관련 통계 전문화·세분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계청 사회통계과는 오는 8월 발표할 '95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동향' 자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가구주의 소득 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을 따로 조사해 밝힐 예정이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7월초에는 94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자료 중 배우자의 소득을 따로 계산해 일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로 맞벌이부부 아내의 소득 규모가 드러날 이 통계로 도시근로자가구 중 맞벌이의 수가 어느정도인지, 맞벌이의 경우 아내의 소득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의 규모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사회통계과 강계두 과장은 "그동안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언급됐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를 전국 통계로 확실하게 밝혀본 적은 없었다"면서 "이번 통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와 가계 기여도 정도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산업통계1과도 올해부터 총사업체통계조사시 그동안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업주의 성별을 조사해 여성 기업주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정무장관(제2)실이 이달초 밝힌 정부 각 부처 '여성정책의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도 통계청이 각종 통계조사시 성별분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부는 '문화통계의 성별분류자료 및 지표개발', 보건복지부는 '보건통계의 성별분류자료 및 여성건강지표 개발' 등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어 여성관련 통계 전문화작업이 앞으로 크게 활기를 띠 전망된다.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38종의 대규모 통계자료 중 성별로 분류돼 따로 여성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되는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총사업체통계조사·산업총조사·인구이동통계·사망원인통계·고용구조조사 등 20여종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이들 자료도 세부적인 여성관련 현황을 파악하려할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은 형편이다.

〈여성통계연보〉를 펴내고 있는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 문유경 연구원은 "예를 들어 택사업 확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계 중 하나인 6살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의 숫자 정도도 현재 전국적으로 전혀 통계가 잡혀 있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조사나 인구센서스·고용구조조사 등에 포함시



그동안 방치됐던 여성관련 통계 전문화 및 세분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통계는 맞벌이가정의 증가, 여성노동의 다양화 등을 제대로 반영해 적절한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켜 통계처리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사업체 임금구조 조사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어 정작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시간제·가내노동 형태가 많은 여성취업활동이 제대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등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